

“중동 상황 충격 완화…민생안정 정책 수단 총동원”

이 대통령, 취약계층 위한 대책 강조 공공요금 동결·유가보조금 지원 속도 경제 회복 위한 추경 신속 편성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충격 가능성에 대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되겠다”며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역시 유가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의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소비,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또 어렵게 맞은 경제회복 흐름도 약화될 수가 있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나 화물차·대중교통·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침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기 극복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산업 독과점화

를 지적하며, 각 부처에 조사·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되고 규모가 커지면서 사실 독점적 지위,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추적,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말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어렵더라도 최

대한 신속하게 해 달라”며 “동시에 치밀하게 안을 만들어 달라. 어렵긴 하겠지만 그게 실력이지 역량”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화학 구조 개편 등 핵심 산업 개혁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를 비롯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바차를 가하자”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중동발 위기를 통해서 우리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각종 탈법·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며 “비정상적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내고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조아미 기자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의결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한 지 석 달 반 만이다. 연합뉴스

나라에 헌신한 만큼 ‘노후에 더 많이’ 군 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내년부터 시작, 2028년 전면 시행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 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지난 1월부

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 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 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 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온전히 인정받는다. 연합뉴스

진해구, 대민지원 해군 장병에 ‘창원사랑상품권’ 준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내달부터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해군 재진부대 복무 장병에게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진해구는 해군 장병들이 대민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누비전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군 장병들은 그동안 재해·재난 구호, 농번기 일손돕기, 취약계층 시설 보수, 플로깅(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민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진해구는 지난해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사업(대민지원 해군 장병 지원)으로 모금한 3000만 원을 재원으로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누비전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해구는 장병들 소비가 지역 상권에서 이뤄지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

강태선 애국지사 위문…보훈 위탁병원 방문도

권오을 장관, 제주 보훈현장 점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존 애국지사를 위문하고 주요 보훈현장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보에 나섰다.

권 장관은 12일 제주도에 거주하는 유일

한 생존 애국지사인 강태선 지사의 자택을 방문, 독립을 위해 헌신한 강 지사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건강·생활환경 등을 살폈다. 이어 제주지역 보훈단체장과 함께 국립제주호국원을 참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령의 넋을 기렸다. 보

훈단체장들에게 지역 현안을 직접 듣는 시간도 가졌다.

권 장관은 또 제주도 준보훈병원 도입을 앞두고 보훈 위탁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찾아가 보훈대상자 진료 현장을 점검하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문했다.

13일에는 오영훈 도지사과 면담한 뒤 제주 4·3평화공원에서 헌화·참배하며 희생자를 추모한다. 참배 후에는 제주4·3희생자

유족회 회원들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고 아픔을 위로할 예정이다.

권 장관은 “제주지역 보훈가족의 목소리를 더 낮은 자세로 듣고, 다양한 지역 보훈 현안을 함께 풀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특히 현장에서 확인한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과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